

■ 광주·전남 현안 예산 챙기기 지역 출신 의원들 나서라

“여수박람회 지원·F1 특별법 상정 온 힘을”

지역발전 특별법 개정·SOC 예산 확보도 관심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정기국회 하반기를 맞아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들이 정기국회 하반기에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에 따라 지역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법안 통과는 물론 정국의 풍향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거대 여당의 공세를 막아내는 최후의 수문장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유선호 법제사법위원회장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한미 FTA 비준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종부세 등 각종 감세법안, 수도권 규제 철폐 관련 법안, 지역발전특별법, 국정원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은 여야 간의 이견 등으로 본회의 상정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 위원장이 상임위 운영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이들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유 위원장은 수석 우세를 바탕으로 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공세는 단호히 제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벌써부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과 박지원 의원 등도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의 공세를 뚫으며 막았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는 예결위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인기 의원은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답게 관공과 경협을 바탕으로 내년도 광주·전남지역 예산을 챙기겠다는 각오다. 여기에 참여정부 장관 출신인 이용섭, 조영택 의원과 우윤근 의원 등도 적극적인 예결위 활동을 통해 지역 예산 챙기기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종 국회 특위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고군분투가 예상된다. 우선 여수박람회특별위에서는 서갑원, 주승용 의원 등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끌어낸다는 태세이고 국제경기지원특별위에서는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영택 의원과 김영록 의원 등이 F1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 국가균형발전 특위에서는 이용섭, 최인기 의원 등이 지역발전특별

법의 개정 등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에서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분전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각종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의 저지를 위해 서갑원 의원과 조영택 의원 등이 선봉에 설

것으로 보이며 기획재정부에서는 김효석 의원과 강운태 의원이 관공을 바탕으로 감세법안 등 정부의 각종 경제 법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토해양위에서는 이용섭, 김성곤 의원 등이 전남지역 SOC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 위에서는 김동철 의원이 출중제를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안,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등을 놓고 한나라당에 맞설 전망이다.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안 등을 놓고 주승용, 김재균 의원이 총력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농수산식품위에서도 이낙연 위원장과 김영록 의원 등이 한미 FTA에 따른 농가대책 수립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안,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등을 놓고 한나라당에 맞설 전망이다.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안 등을 놓고 주승용, 김재균 의원이 총력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농수산식품위에서도 이낙연 위원장과 김영록 의원 등이 한미 FTA에 따른 농가대책 수립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12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1호실에서 열린 국회 예결위, 광역자치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한구 예결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예산안 반영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연필뉴스

“중앙당 눈치만 보고 지역 팽개치나”

한나라 광주시당·전남도당에 비난 확산

“중앙당 눈치만 보고 지역을 팽개치는 것이냐?”

광주·전남지역에서 한나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등 지역 발전에 부정적인 정부 정책이 잇따라 발표돼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도 지역 민심과 대응 방안을 정부와 중앙당에 전달하기는 커녕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의 경우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철폐 정책 발표 등 지역 경제를 고사시킬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개적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높음에도 성명이나 논평조차 내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 정책을 적극 설명하거나 대변하는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 각 지자체들과 지방의회, 시민단체들은 지역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안 갈등을 부추기

는 수도권 규제 철폐 방안과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등에 대한 반대·철폐 성명과 논평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집권 여당이라는 한나라당은 ‘당 차원의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은 있을 뿐 보이지 않는다’, ‘불모지라고 하지만 너무 무관심, 무신경한 것 아니냐’, ‘지역을 챙기는 대신 당 입장만을 따르면서 몸사리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광주·전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만큼 광주시당·전남도당이 지역민들과 접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부와 중앙당에 과감히 전달하는 등 소통하는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그나마 집권 여당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호남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지을기자 dok2000@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지방의회와 연계

국회의원 비상 모임

대규모 집회 계획도

12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철폐 방침에 반대하는 비수도권의 분노를 장외집회를 통해 보여준 ‘국회의원 비상모임’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실무 협의를 갖고 정부의 지방발전 대책 발표 이전에 다시 한 번 대규모 실력 행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여의도 국회 앞보다는 광화문 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정부에 고강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회 등과 연대, 각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 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비상모임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되는 않았지만 조만간 실무 협의를 통해 대규모 장외 집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히, 각 지역별로 동시다발적인 반대 운동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여론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비수도권 의원들과 광역단체장들이 당 지도부의 만류로 비상모임에 합류하지 않고 장외집회에도 불참,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운동의 상당한 동력이 상실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발표되는 정부의 지방발전 대책 내용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여론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의 지방발전 대책이 과거 발표 한 사항을 까집기 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여론은 다시 한 번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한나라당 비수도권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또,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법안들이 대폭 수정되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국회 예결특위,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

국회 예결특위는 이한구 위원장을 비롯해 3개 교섭단체 간사와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2009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예결특위가 이렇게 지방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우선 개별 자치단체의 내년도 지역 현안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이날 진곡산단 진입도로 300억원, 신·재생 에너지복합단지 조성 236억원, 가전로봇산업육성 115억원 등 모두 3건 651억원의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박재영 행정부지사는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 건설 250억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900억원, 전라선 익산-순천간 복선전철화사업 1천300억원 등 44건 1조686억원의 추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또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 F1 특별법 제정, 호남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도 요구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예산 편성에 관한 다양한 제도 개선안도 내놓았다. 특히 중앙에서 지방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예산을 짤 때부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

광주 가전 로봇 육성 등 651억 추가 지원 요구

전남 전라선 복선화 등 1조 6백억 반영 건의

링(상한) 시스템’을 도입, 그 범위에 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최근 정부와 여당이 지방 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려는 데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불균형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세원이 빈약한 지역에는 오히려 지방교부세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됐다.

시·도지사들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시도지사들은 ▲사회복지 분야 관련 국고지원 확대 ▲지하철 부채상환금 지원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 국고지원 확대 등을 건 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인천, 충북, 전남, 경남지사를 제외한 11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이한구 예결위원장과 한나라당 이 사철 간사, 민주당 최인기 간사, 선진 과 창조모임 류근찬 간사가, 정부 부처상환금 지원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 국고지원 확대 등을 건 의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